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이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와 과제*

이봉기**

이 논문은 동독의 2민족론과 사회주의 독일민족 담론을 분석하며, 동독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 내지 두 민족을 주장하는 배경과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다. 동독은 국가 수립 초기에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믿으며 1민족 1국가를 주장하였으나 이후 국가연합제에서는 1민족 2국가로 입장을 바꾸었다. 1969년 10월 서독은 사실상(de facto)의 2국가를 통해 동독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민족 단일성 유지' 정책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한 동독의 응답이 2민족론이었다. 동독은 기존의 민족이론에 계급문제를 도입하여, 스스로를 '사회주의 독일민족'으로 칭하면서 서독과 통일을 부정하였다. 나아가 사회주의 독일민족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역사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통일로 동독의 2민족론은 실패한 역사가 되었으나 실패한 역사의 유산은 통일된 독일의 통합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2민족론으로부터 예상되는 대남 차단정책에 효율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통일원칙과 평화공존 간의 접점(병렬, 병존, 공존 및 통합 방식 등)을 찾아야 한다.

주제어: 동독, 2민족론, 사회주의 독일민족, 민족성, 유산과 전통, 통일원칙론, 평화공존론

* 이 글은 필자의 소논문, “동독의 2국가 2민족론의 전개 과정과 배경(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39, 2024.05.30.)”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킨 논문이다. 심사위원 세 분의 고견으로 더 나은 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1. 시작하는 말

동독의 민족문제에 대한 방향 전환, 즉 2민족론의 주장은 동서독 관계에서 이전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었고, 소련의 대서방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동독은 이와 관련 소련과 의견 조율을 선행해야 하였다.

1970년 8월 21일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제1 서기는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당서기에게 동독이 준비한 민족문제에 관하여 9월에 소련에 설명하는 기회를 요청하였고, 브레즈네프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독(DDR,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민주공화국, 이하 '동독'으로 약칭) 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통당'으로 약칭) 대표단은 1971년 2월 9~10일간 모스크바에서 소련공산당 당중앙위 위원들과 “독일 역사에서 민족 문제의 발전(Die Entwicklung der nationalen Frage in der deutschen Geschichte)”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동독이 제시한 문건은 소련 공산당 정치국에서도 논의되었고 소련의 입장은 동서독 간 협력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하였고, 동독에서 “사회주의 독일 민족(sozialistische deutsche Nation)”이 발전하고 있다는 개념을 승인하였다.¹⁾

동독 사통당 협의그룹은 1971년 2월 23일 사통당 당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협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소련 측은 동 문

1) Walter Schmidt,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hefte zur ddr-geschichte* 38(Berlin: Helle Panke, 1996), p.9.

건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문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최초 공식 입장 표명이기 때문에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을 넘어서 그 영향력이 훨씬 광범위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북한 노동당’에 대해 언급하였다.²⁾

제국주의와 국제적 대결에서 민족문제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북한 노동당과 베트남 근로자당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고려해야만 한다.

소련은 동독에 대해 서독 내 진보세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하여 독일 민족의 단일성이라는 신화와 공동체에 대한 환상을 타파할 것을 요구하였다.³⁾

북한은 동독이 2민족론을 주장한 때부터 50년이 더 지난 시점에 동독이 실패한 2민족론을 역사에서 다시 소환하고 있다. 즉,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23년 12월 30일 당중앙위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고,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공화국의 민족역사에

2) *Ibid.*, pp.53~55.

3) *Ibid.*, pp.8~9. 당시 소련과 협의 문서는 1971년 2월 23일 사통당 당중앙위에 보고되었는데, 문건의 제목은 “1971년 2월 23일 사통당 당중앙위 정치국에 제출한 문건, 독일 역사에서 민족문제의 발전에 관한 소련 공산당 당중앙위와 협의에 관한 사통당 협의그룹의 보고서(Bericht der Konsultation mit dem ZK der KPdSU zum Dokument “Entwicklung der nationalen Frage in der deutschen Geschichte” vor dem Politbüro des ZK der SED am 23. Februar 1971)”였다. Arbeitsprotokoll der Politbürositzung vom 21.02.1971. In: SAPMO-BArch. DY 30 J IV 2 2A – 1,500(Walter Schmidt, pp.53~55 재인용).

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지시하였다. 이를 북한의 2민족 2국가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은 분단 기간 중 서독에 대한 통일정책으로서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⁴⁾을 1민족 1국가론에서 1민족 2국가론을 거쳐 2민족 2국가론으로 변화시켰으며, 2민족론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였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독일민족”을 정의하고 나아가 이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여기에서는 동독의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하여 북한이 2민족론을 주장하는 배경과 우리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동독의 대서독정책이 어떻게 1민족 1국가에서 2민족 2국가로 변화하였는지를 간략히 다루고, 3장에서는 2민족론의 성립 과정, 동독이 주장하는 2민족론의 개념, 그리고 2민족론의 대두 배경을 검토하고, 4장에서는 2민족론의 시기별 전개 과정, 동독의 사회주의 독일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의 소환, 그리고 2민족론과 관련한 동독 주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동독의 사례로부터 북한이 동족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배경과 우리에게 주는 함의 및 과제 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4) 동서독 분단시기 동서독 모두 대서독정책 및 대동독정책 또는 통일정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독일정책은 양국 간 관계 및 교류협력, 통일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2. 1민족 1국가에서 1민족 2국가를 거쳐 2민족 2국가로

1) 1민족 1국가에서 1민족 2국가로

동독은 국가 수립 초기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대한 확신으로 전 독일을 사회주의화한다는 목표를 헌법에 담았다. 1949년 동독의 헌법 1조는 “독일은 하나의 분리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이다”, “독일 국적은 단지 하나만 존재한다”⁵⁾라고 규정함으로써 1민족 1국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1953년 6월 17일의 ‘노동자 봉기’는 노동자 국가로서 동독의 체제 정당성을 흔들었고, 울브리히트 당중앙위 1서기는 1953년 9월의 당중앙위 16차 회의에서 “독일에 사실상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하였고, 두 달 후 인민의회에서 두 개 국가 테제, 즉 서독이 존재하고 평화롭게 사는 민주국가 동독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2국가 테제는 소련 흐루쇼프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즉 1955년 5월 서독은 NATO에, 동독은 바르샤바조약(WTO)에 가입하여 양 진영의 체제로 통합되었고, 1955년 7월에 개최된 독일의 통일문제 관련 제네바 정상회의는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결국 합의에 의한 독일 문제의 해결은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에 대해 흐루쇼프는 제네바 정상회담 후 귀국하면서 동베를린을 방문(1955.7.26.)하여 두 개 국

5) 동독은 1949년 제헌 헌법에서 서독과 마찬가지로 1913년 독일제국이 제정한 ‘제국 국적법’을 적용하여 서독 주민도 동독의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제국 국적법은 서독에서도 유효하였으므로 동서독 모두 동일한 국적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동독이 1민족 2국가를 주장하면서 1967년 2월 20일 동독 국적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독에서 제국 국적법의 효력은 배제되었다.

가이론(Zwei-Staaten-Theory)을 제시하였다. 즉, “2차 대전 이후 독일제국의 영토 위에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질서를 가진 두 개의 주권국가 가 세워졌다”는 것이었다.⁶⁾

동독은 2국가 주장 이후 1956/57년부터 1967년까지 서독에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연합제구상을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1956년 12월 30일 울브리히트는 “독일에 다양한 사회적 체제를 가진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어 우선은 두 국가 간 접근이 필요하고, 통일과 진정한 민주적 국민의회 선거를 실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연합제(Konföderation) 또는 연방제(Föderation) 형태의 중간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⁷⁾라고 하였다.⁸⁾ 그러나 동독의 국가연합제 제안은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려운 “양 독일의 군사 동맹에서 탈퇴, 외국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동독의 공식적 국가연합 제안에는 “전제조건”이 아닌 국가연합의 “첫 번째 과제”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였지만,⁹⁾ 이는 국가연합제 논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언어유희라

6) Lemo, “Zwei-Staaten-Theorie,” https://www.hdg.de/lemo/kapitel/geteiltes-deutschland-gruenderjahre/deutsche-frage/zwei-staaten-theorie.html?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년 1월 30일).

7) Gottfried Zieger, *Die Haltung von SED und DDR zur Einheit Deutschlands 1949~1987*(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88), p.84.

8) 참조: “사통당의 국가연합안 또한 서로 다른 체제의 병존을 언급했지만 이는 단지 일시적 성격만을 지니는 것뿐이었다. 그렇기에 사통당 지도부는 국가연합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통합적 국민국가로의 재통일을 위한 이행기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동기, “1950년대 후반 동독 사통당(SED)의 국가연합 통일안,” 『서양사론』, 제102호(2009.9.), 304쪽.

9) 위의 글, 307쪽.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동독은 국가연합제에서 두 국가 간 장기적 공존을 통한 통일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관점은 유지하였다.

동독은 국가연합제를 통해 현실적으로 이미 성립된 1민족 2국가를 정당화하면서, 독일 문제의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연합제 제안은 서독의 단독대표권에 대한 대응 차원의 전략으로 서독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서독으로부터 동등한 주권을 가진 대화 상대방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독이 이를 거부하였고 울브리히트가 1967년 4월 7차 당대회에서 두 독일의 존재가 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며, 독일문제는 다만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이후 동독은 국가연합제를 더 이상 제안하지 않았다.¹⁰⁾

2) 1민족 2국가에서 2민족 2국가로

1966년에는 서독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사회민주당(SPD, Die 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민당’으로 약칭)이 기독교 민주연합(CDU, Christlich Demokratische Union Deutschlands, 이하 ‘기민련’으로 약칭)과 소수 파트너로 대연정을 통해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고, 동독 사통당 지도부는 “사민당의 대자본 및 독점자본 정부에 참여를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으로 평가하였다.”¹¹⁾ 이러한 서독에서의 정치적

10) Andreas Herbst et al. (Hg.), *Die SED – Geschichte / Organisation / Politik, Ein Handbuch*(Berlin: Dietz Verlag, 1997), p.312.

11) Heike Amos,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 Ziele, Aktivitäten und Konflikte*(Göttingen: V&R, 2015), p.595.

상황의 전개는 동독 지도부로 하여금 통일과정에서 사민당이 노동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동독 사통당의 우군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점차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사통당으로 하여금 통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때부터는 보다 명확한 두 국가 정책, 즉, 동독의 서독에 의한 국제법적 승인 요구가 강화되었다. 우선 동독은 1967년 2월 8~10일에 개최된 바르샤바 조약기구 외교장관 회의에서 서독의 할슈타인 독트린에 대하여 울브리히트 독트린(Ulbricht-Doktrin)을 마련하였다. 즉, 서독이 동독에 대해 단독대표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바르샤바조약의 회원국은 서독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지 않도록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¹²⁾

또한 동독은 1968년 헌법 개정을 통해 1조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국가(ein sozialistischer Staat deutscher Nation)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같은 독일 민족으로 동독에는 사회주의 국가가, 서독에는 자본주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였다(1민족 2국가). 특히 8조 2항은 “평등한 권리에 기반한 두 독일국가의 협력과 정상적 관계의 수립과 육성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민족적(nationales) 관심사이다. 독일민주공화국과 국민은 제국주의에 의해 독일 민족(deutsche Nation)에 강요된 독일의 분단 극복 그리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기반한 통일까지 두 독일 국가의 점진적 접근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서독이 하나의 민족으로 무엇보다도 동독이 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을 헌법적 명령으로 규정한 것이다.

12) bpb, “Deutschland-Chronik bis 2000,” <https://www.bpb.de/themen/zeit-kulturgeschichte/deutschland-chronik/131594/15-maerz-1967/>(검색일: 2025년 1월 30일).

이 시기 서독의 정치적 상황이 동독의 낙관적 기대를 조장하는 요인도 있었으나 결국 좌절로 이어졌다. 1956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KPD(Kommunis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구 공산당’으로 표기)의 후속 정당으로 DKP(Deutsche Kommunistische Partei, 이하 ‘신 공산당’으로 표기)가 1968년 서독에서 재창당되었다. 동독 사통당 지도부는 서독 공산주의자의 서독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 증가에 희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었다. 따라서 동독은 1969년 9월 서독의 총선을 위해 신(新)공산당(DKP)에 대한 물질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총선에서 15명 정도의 의원이 당선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공산당(DKP)은 단지 0.3%라는 거의 참패에 가까운 득표에 그치고 말았다.¹³⁾ 이러한 결과는 동독 지도부가 염두에 둔 서독적 요인, 즉 통일 과정에서 서독 내 공산주의자에 의한 연대와 지지를 통해 서독을 사회주의화한다는 생각이 사통당의 꿈에 지나지 않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동독에 남은 선택지는 현재의 동독을 사회주의 국가로 유지하는 수정 전략 외에는 없게 된 셈이었다.

동독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전격적인 방향 전환은 1970년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야기한 결정적 계기는 1969년 10월에 출범한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총리가 1969년 10월 28일 시정연설에서 주장한 “독일민족의 통합 유지(den Zusammenhalt der deutschen Nation zu wahren)” 노선 정책이었다. 동 연설에서 브란트 총리는 동독에 대한 국제법적인 승인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비록 독일 영토 위에 두

13) Heike Amos,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 Ziele, Aktivitaeten und Konflikte*, p.600.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외국은 아니다. 상호관계는 ‘단지 특별한 관계(besonderer Art)’이다¹⁴⁾라고 하며 서독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ktrin)에 의한 단독대표권을 폐기하였다. 이는 “사실상”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하면서 동독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1970년 1월 14일 연방하원의 “민족 상황에 관한 보고(Bericht zur Lage der Nation)”에서도 민족의 단일성(Einheit der Nation) 유지를 재차 강조하였다.¹⁵⁾ 브란트 총리는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역사적 사실과 정치적 의지가 통합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동독(1968년) 헌법에서조차 동독 자신을 독일 민족의 일부라고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동독의 대응은 1970년 초 2민족론(Zwei-Nationen-These)이었다. 올브리히트 제1 서기는 1970년 1월 19일의 국제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독일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는 주장은 허구이며,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 그리고 억만장자와 노동계급 사이에는 민족적 통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응수하면서 동독을 사회주의 독일 민족국가(sozialistischer deutscher Nationalstaat)라고 주장하였다.¹⁶⁾ 이렇게 동독의 2민족 тезис은

14) 이에 대하여 동독 올브리히트는 12차 당 전원회의(1969.12.12.~13.)에서 단독 대표권의 새로운 변형이라고 비난하였다. Roland W. Schweizer, “Die DDR und die Nationale Frage. Zum Wandel der Positionen von der Staatsgründung bis zur Gegenwart,” *APuZ*, 1985.12.21.

15) 브란트 총리는 민족 상황에 관한 보고에서 민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3.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향후 실질적 정책의 과제는 이것이 가능한 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한 독일의 부분들 간(양 독일 간)의 관계를 현재의 경직된 상태에서부터 풀어내는 것을 통해서 민족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6) Roland W. Schweizer, “Die DDR und die Nationale Frage. Zum Wandel der

시작되었다. 서독이 동독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1민족 2국가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민족 동질성 유지를 전면에 내세우자, 동독은 2민족론을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독일민족과 자본주의 독일민족의 통일불가론으로 대응하였다.

3. 2민족론(Zwei-Nationen-Konzept)의 성립 과정, 개념 그리고 배경

1) 1970년대 초반 동독에서 2민족론의 성립 과정

동독에서 민족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이미 1966/67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¹⁷⁾ 1960년대 말부터 동독의 서독에 대한 경계짓기정책(Abgrenzungspolitik)¹⁸⁾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Positionen von der Staatsgründung bis zur Gegenwart,” *APuZ*, 1985.12.21.

17)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글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동기, “1967~1974년 동독의 통일 포기과 이민족론,” 『평화들 PEACES』, 제3권 1호(2024.5.), 57~90쪽.

18) ‘Abgrenzungspolitik’은 동독이 1960년대부터 서독에 대해 취한 정책이다. 이를 ‘차단정책’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서독 관계의 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차단정책이라고 하면 서독과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미가 두드러지며, 1972년 동서독기본조약 체결 이후 동서독관계의 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서독과 차별하여 자신의 체제적 특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경계짓기정책(Abgrenzungspolitik)”으로 번역한다. Jürgen Reuter, “Die Abgrenzungspolitik der DDR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n siebziger und frühen achtziger Jahren”(Bonn: 1991), Dissertation, pp.115~120.

어 서독을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와 분리하는 프로파간다로 “조국 동독(독일민주공화국)”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65년에 전체 독일의 통일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전독문제 국무서기국(Staatssekretariat für gesamtdeutsche Fragen)”이 1967년에 단순히 서독문제를 다루는 “서독문제 국무서기국(Staatssekretariat für westdeutsche Fragen)”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하였다.¹⁹⁾

이렇게 전개되고 있었던 동독의 정치적 상황하에서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69년 10월 정부성명에서 민족의 단일성 유지를 강조하자 동독의 대응이 보다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1월 19일의 울브리히트 기자회견 이후 2월 맑스-레닌주의 연구소는 쿠르트 하거(K. Hager)의 지도 아래 19세기 중반 이후 독일에서의 민족문제 발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1971년 2월 소련과의 민족문제에 관한 자문회의로 이어진 것이다.

새로운 민족개념의 공식적 프로파간다는 그사이 울브리히트를 권력에서 밀어내고 새로운 당서기장(1971.5.)이 된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에 의해 1971년 6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 시작되었다.²⁰⁾ 호네커는 당대회 경위보고서에서 “민족문제에 관해서는 역사가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언급하면서, “부르주아 민족이 존속하고 있고 민족문제가 부르주아와 노동자 대중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계급모순을 통

19) Walter Schmidt,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p.6.

20) 울브리히트는 1971년 5월 3일 고령을 이유로 당 제1 서기에서 물러났는데, 호네커가 궁정혁명을 통해 울브리히트를 소련의 승인하에 권좌에서 쫓아낸 것이었다.

해 결정되는 서독과 달리 동독에서는 사회주의 독일국가, 사회주의 민족이 발전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²¹⁾

동독은 이러한 2민족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로 1974년 10월의 개정 헌법에서 1968년 헌법 1조의 “독일민주공화국은 독일 민족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조항을 “독일민주공화국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68년 헌법의 “분단 극복 및 통일”이라는 단어를 74년의 헌법에서 모두 지워 버렸다. 숙고된 계획 없이 쏟아낸 정치적 언어들만 먼저 사용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론화 작업이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였다.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가 서독을 다른 민족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서독과 동독이 이민족(異民族)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동독 주민과 지식인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하여 1974년 호네커는 2민족론에 대한 그동안의 경직된 접근을 수정하였다. 이전에는 동독의 독일 민족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였는데, 민족성(Nationalitä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동독 주민이 독일인의 인종적 특성을 서독과 공유한다고 하였다. 즉, 1974년 12월 12일 당중앙위 13차 회의에서 호네커는 “국적(Staatsbürgerschaft)은 동독(DDR), 민족성(Nationalität)은 독일인(Deutsche)”이라는 새로운 인식은 아니지만 그때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설명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초 Deutsche, Deutschland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서 후퇴하였다.²²⁾ 여기서 Nationalität(민족성)은 코

21) Protokoll des VIII. Parteitages, p.55 f;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 · Kultur in der Bildungsgesellschaft 1958-1976*(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19), p.1424 재인용.

22) Juergen Reuter, “Vor zwanzig Jahren Honecker führt die Unterscheidung

징(A. Kosing)에 따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역사적 개념으로 민족의 이전 단계인 ‘민족체’, 즉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별한 사회적 단위를 의미하고, 둘째는 인종적 특징이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특별한 사회적 단위와 그들 구성원을 의미한다. 동독은 서독과 동일한 인종적 특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Nationalität의 두 가지 의미에서 후자를 사용한 것이었다.²³⁾

2) 2민족론에서 사회주의 독일민족의 정의

동독에서 민족의 본질에 관한 새로운 해석은 스탈린 민족 개념의 수정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민족 개념은 스탈린의 민족 개념, “공통의 언어, 영토, 경제적 생활 그리고 사회심리적 특징”을 경시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요소, 즉 계급문제를 민족의 본질적 요소로 보는 것이다. 계급문제를 민족의 정의에 끌어들이므로 동시에 맑스와 레닌의 민족에 대한 이해와 연결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²⁴⁾

코징(A. Kosing)과 슈미트(W. Schmidt) 그리고 악센(Hermann Axen)이 동독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민족 개념을 정립하였다. 코징과 슈미

zwischen “Nationalität” und “Nation” ein,” *Potsdamer Bulletin fuer Zeithistorische Studien*, Nr. 3/Juni 1995, p. 43.

23) 여기서는 ‘Nationalität’를 역사적 개념인 민족 형성 이전의 ‘민족체’와 구분하여 사용하기 위해 인종적 특징을 강조하는 후자를 ‘민족성’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Alfred Kosing, *Nat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Berlin: Dietz Verlag, 1976), p.155.

24) Werner Weidenfeld,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DEUTSCHEN NATION*(München: Olzog Verlag, 1981), p.98.

트는, “한 민족의 발생과 발전은 객관적, 물질적 요소와 각각의 역사적 계급투쟁과 계급의 힘에 의해 특성화된다. 민족의 내용과 특성을 정하는 것은 (스탈린이 언급한) 인종적, 언어적 그리고 사회심리적 특징이 아니라 사회 각각의 토대, 계급관계 그리고 계급의 역사적 행위 특히 사회와 민족을 지배하는 지도계급이다”²⁵⁾라고 정의하였다. 악센도 이들과 유사한 의미로 민족 개념을 설명하였다.

인종적 특성이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민족의 본질, 사회경제적이고 계급적인 구조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동독에서 우리의 민족을 정의하는 본질은 사회주의이며, 그것은 우리 사회의 계급적이고 사회경제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계급적 요인들은 자연스럽게 인종적 요인들의 사회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²⁶⁾

악센은 사회주의 독일 민족은 “노동자와 농민의 권력, 사회주의적 생산방식, 국내 및 대외 정책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회주의 독일 민족으로서 동독의 특징이며, 이는 자본주의 독일 민족, 서독과 완전히 반대”²⁷⁾된다고 주장하였다.

동독은 1970년대 이후 이렇게 민족성과 민족을 구분하고 민족의 개

25) Werner Weidenfeld,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p.98.

26) Hermann Axen, *Zu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Nation in der DDR*(Berlin: Diez Verlag, 1973), pp.15~16.

27) *Ibid.*, p.19.

념에서 계급문제가 본질적 요인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민족 개념을 발전시켰다. 민족성(Nationalität)은 인종적, 사회심리적 특징의 복합체로, 민족(Nation)은 민족성에 계급적 성격이 부여된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동독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독일 민족(sozialistische deutsche Nation)'과 '자본주의 독일 민족(kapitalistische deutsche Nation)'은 인종적 특징을 공유하는 동일한 독일 민족성(Nationalität)을 가지지만, 계급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징들은 공유하지 않으므로 같은 민족(Nation)이 아니라는 것이다.²⁸⁾ 악센(H. Axen)은 동독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자신의 사회주의 민족문화와 사회주의 민족의식을 형성해서 높은 사회적 발전 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서독 체제와의 통일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였다.

동독은 이러한 민족 개념의 정립을 통해 양 독일 간 통일에 대해 부정하였고, 이를 1976년 5월 22일 새롭게 확정한 당강령에 도입하였다. 여기에 '사회주의 민족의 발전'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였다.

... 동독은 사회주의 독일민족을 발전시켰다. ... 사회주의 독일민족은 동독의 국민을 포괄하며 그 영토 위에서 주권을 소유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징을 갖는다. 경제적 토대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를 발달시킨 사회주의 국민경제이다. 맑스-레닌주의가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 동독의 시민은 대다수가 독일 민족성을 갖고 있으며. ... 사회주의통일당은

28) Redaktion des Diez Verlages, *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Berlin: Diez Verlag, 1988), pp.648~652.

모든 종류의 부르주아 민족적 개념에 대한 철저한 투쟁에 ...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²⁹⁾

이로써 1976년의 새로운 당강령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도 사라졌다. 그렇지만 이것이 서독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독일 민족이 어느 날 지양되고 이들 서독 국민이 사회주의 민족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동독은 통일이라는 목표를 주도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통일 추진이 오히려 서독에 의한 통일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뿐이다. 이와 관련 호네커는 1981년 2월 동베를린의 지역대표회의에서 두 독일국가 간 통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³⁰⁾

오늘날 서독의 특정 사람들이 대독일주의적 발언을 하며 마치 양 독일의 통일이 자신의 지갑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다. 어느 날 사회주의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서독의 노동자들이 서독의 사회주의 변혁을 시작하는 날이 온다면, 두 독일국가의 통일 문제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29) Programm & Statut der SED(Koe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76), pp.91-92.

30) Werner Weidenfeld,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DEUTSCHEN NATION*, p.100.

3) 2민족론(Zwei-Nationen-Konzept)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

동독이 이렇게 급진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하게 된 배경과 조건은 무엇일까? 여기에서는 슈미트(W. Schmidt)와 디트리히(G. Dietrich)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의 배경 및 조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³¹⁾ 동독 사통당 지도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존의 독일 민족의 존속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논지를 밀고 나갔다.

첫째, 1960년대 사통당 지도부에게 명백하게 된 것은 그들의 전 독일적 요구, 즉 반제국주의적이고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한 통일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독이 1950년대 장기 호황을 시작했을 때, 동독은 중앙집중화된 경제체제로 불경기가 나타났다. 동독이 1961년까지 서독을 추월할 것이라는 허세 섞인 발표는 실패로 끝나고,³²⁾ 양 독일 간 격차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다. 특히 1961년 8월 13일의 장벽 건립은 체제경쟁의 패배 - 1949년부터 1961년까지 25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하였고 탈출인구 중 거의 절반은 25세 미만이 었다 - 를 공표하는 사건이 되었다.³³⁾ 또한 1960년대 서독의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안정과 공고화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31) Walter Schmidt,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pp.12~16;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 · Kultur in der Bildungsgesellschaft 1958-1976*, pp.1424~1426.

32) Peter Graf Kielmansegg, *Nach der Katastrophe - Eine Geschichte des geteilten Deutschland* (Berlin: Siedler Verlag, 2000), p.598.

33) 디트릭 올로(Dietrich Orlow), 『독일 현대사: 1871년 독일제국 수립부터 현재 까지』, 문수현 옮김(서울: 미지박스, 2019), 616쪽.

즉, 체제경쟁에서 동독이 서독에 패한 것이었고, 이제 자신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독에 의한 통일을 경계해야 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1975년 헬싱키 의정서로 이어진 프로세스가 1966년에 시작되었고 이러한 국제적 요인은 독일에도 영향을 미쳤다. 헬싱키 의정서는 2차 대전 이후 획정된 영토 등 국제질서를 인정하고 양 체제, 즉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서독에서도 단독대표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났고 독일의 현실, 즉 동독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즉 동독의 2국가론은 서독에게는 유감스러운 상황(*bedauerlicher Zustand*)이지만 동독에게는 생존의 조건(*Existenzbedingung*)이라고 하였다.³⁴⁾ 이에 대해 동독의 지도부가 추진한 정책은 서독이 동독을 주권국가로서 국제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양 독일 간 평화적 공존이었다. 이러한 진영의 공존은 한쪽은 사회주의 민족, 다른 쪽은 자본주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셋째, 1969년 10월 28일 브란트의 정부성명과 1970년 1월 14일의 민족현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독일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고 함으로써 서독이 단독대표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독일문제는 국가적 수준에서 (잠정적으로) 해결된 것이었고, 이제 독일문제는 민족적 수준으로 강조점이 이동되었다. 서독은 이제 민족은 국가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두 개 국가를 묶어 주고 덮어 주는 지붕으로서 민족을

34)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 · Kultur in der Bildungsgesellschaft 1958-1976*, p.1433.

민족의 자결권과 함께 강조하였다. 결국 서독은 사실상(de facto) 두 개의 독일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공격적 지위가 되었고, 동독의 2민족론은 동독 지도부의 수동적 대응이었고 민족적 개념에 대한 급진적 변화를 의미하였다.

넷째, 동독에서 민족문제에 관한 정책 변화는 동독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70년대 초 서독의 일부 학자들이 동독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인지하고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³⁵⁾ 사회학적 조사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동독 주민의 다수가 동독의 사회와 국가에 대해 동일시한다고 보기도 하였다.³⁶⁾ 이것은 동독의 경제적 안정 및

35) 참조: 이와 관련 이동기 교수는 서독에서 일부 학자들이 “사회 경제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화의 인지와 해석, 경험과 공유의 차이가 낳은 행동이나 가치나 합의를 통한 집단적 자기 인식의 차이에 기초해 서독 주민과 동독 주민들은 이미 하나의 단일한 독일민족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독자적인 집단적 유사민족이 형성 중임을 부각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동독의 이민족론(Bi-Nationalisierung) 주창자들은 서독의 학자들보다 더 나아가 “역사적 발전 단계의 차이가 낳은 결과로서 이민족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동독의 독자 발전 정도와 동독 주민들의 집단 정체성을 과잉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동기, “1967-1974년 동독의 통일 포기 와 이민족론,” 75-76쪽.

36) Walter Schmidt,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pp.12-16. Niemann은 동독에서 “1945년 이후 소비에트적 요인에 의해 각인된 사회적 개념이 자리 잡고 시민들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사회적 동질성의 정도가 높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동독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설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반파시즘적 사회로서 동독, 노동사회로서 동독, 평등사회로서 동독, 집단주의적 사회로서 동독, 여성해방적인 사회로서 동독, 권위적-관료적 사통당 국가로서 동독, 문화사회로서 동독, 이종적으로 규정된 미디어사회로서 동독, 독일 부분사회로서 동독 등.” Heinz

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1953년 6월 노동자 봉기 이후 동독은 계획경제의 우선순위를 소비재 공급에 두었고 1960년대에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960년에는 동독의 6% 가구만이 냉장고를 소유하였으나 1970년에 이르러서는 56.4%에 이르렀으며 1967년에는 토요일 근무가 폐지되었고 1주일당 근로시간은 임금 삭감 없이 43.75시간으로 줄었다. 이러한 1960년대의 상대적 번영은 동독 정권의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³⁷⁾ 생산성과 생활수준에서 동독은 서독에 비교해서는 훨씬 떨어졌지만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을 훨씬 능가했다.³⁸⁾

다섯째, 정체성과 국가 의식에 대한 문제는 동독 체제의 정당성 결핍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내 정치적 및 사회 내부의 문제였다. 동독 정권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는 선전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동독 민족의식을 만들어 체제의 정당성 강화에 이용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민족, 사회주의 조국, 사회주의 고향 혹은 우리의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공식화하여 주민에게 ‘동독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였다.

Niemann, *Hinterm Zaun* (Berlin: Edition Ost, 1995), pp.61~126.

37) 카트야 호이어(Katja Hoyer), 『장벽 너머: 사라진 나라, 동독 1949-1990』, 송예슬 옮김(서울: 서해문집, 2024), 327~329쪽.

38) 디트릭 올로(Dietrich Orlow), 『독일 현대사: 1871년 독일제국 수립부터 현재까지』, 628~633쪽. 1960년경의 동독 노동생산성은 서독보다 25% 낮았고, 생활수준은 40% 낮았다.

4. ‘사회주의 독일 민족(Sozialistische deutsche Nation)’의 정체성 강화와 동독 주민의 수용

1970/80년대 동독에서 2민족론의 이론화 작업에 직접 참여하였던 동독의 역사학자 발터 슈미트(Walter Schmidt)는 통일 이후 1996년에 발표한 자신의 글에서 정치적, 학문적 관점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제약했던 동독의 2민족론의 전개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⁹⁾

첫 번째 단계는 1970년대 초부터 1974년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독에 대한 경계짓기정책(Abgrenzungspolitik)의 형태였다. 두 번째 단계는 호네커가 1974년 12월의 사통당 당중앙위 13차 회의에서 동독의 국민도 독일 민족성(Nationalität)을 갖는다고 선언한 이후부터 사회주의 독일 민족에 대한 개념적 및 이론화 작업이 진행된 1970년대 말까지이다. 동독은 1960~70년대의 경제 발전으로 사회주의권 내에서 특별한 경제적 위상을 인정받았고, 외교 관계의 확대, 유엔 가입, 헬싱키 협정 참여 등으로 동독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국가적 자의식이 높아졌고 대중도 이를 지지하고 수용하던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1980년대로 이 시기에는 이전에 확립된 민족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던 시기이자 동시에 민족문제가 점차 정치와 학문적 논의에서 중요성이 감소한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동독 지도부가 서독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과 연결되어 있었고

39) Walter Schmidt,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pp.16~29.

호네커의 1987년 9월 서독 방문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네 번째 단계는 동독 말기로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민족문제를 학문적으로 집중해서 다루고 프로파간다로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재현되었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1960년대와 1970년대 진행된 민족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원의 박사논문을 활용하였고 1988년 2월에는 민족문제연구단(Arbeitsgruppe zu Fragen der Nation)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는 서독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내부적으로 동서독 간 민족적 공통성이 다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독의 국가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동독의 민족적 자주성과 독자적 발전을 강조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독의 경제적 위기와 소련에서 시작된 개혁/개방 등으로 민족문제가 공론장에서 배제되었고, 점차 사통당 당원에게도 불신되었다.

1) 자본주의 독일 민족과의 결별과 사회주의 독일 민족으로의 정체성 강화

(1) ‘Deutsche와 Deutschland’ 단어 지우기와 통일 관련 기관의 해체

독일에서 「Deutsch」(독일의'라는 형용사)는 1871년 수립된 독일 제국(Deutsches Reich)에서 처음으로 국호로 사용되었고, 「Deutschland」(독일을 의미하는 명사)는 1949년 수립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 최초로 국가 명칭으로 사용하였다. 동독 사통당은 자본주의 독일 민족(서독)과 결별하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기관 명칭에서 “Deutsche와 Deutschland”라는 단어를 지우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독일방송(Deutschlandsender)’은 1971년에 ‘동독의 목소리(Stimme der DDR)’로, ‘독일학술원(Deutsche AdW)’은 1972년 이후 ‘동독학술원(Akademie der Wissenschaften der DDR)’으로 바꾸는 등 이러한 방식으

로 다양한 기관과 조직의 이름을 변경하였다.⁴⁰⁾ 그러나 동독은 자신의 국호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호 사용 시에도 ‘Deutsche’가 드러나지 않게 가급적 약어인 ‘DDR’을 사용하였다.⁴¹⁾

1965년 12월 18일 동독 사통당은 국민들에게 통일이라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서독의 전독문제부(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전독문제국무서기국(Staatssekretariat für gesamtdeutsche Fragen)을 설치하였는데, 그사이 명칭이 서독문제국무서기국(Staatssekretariat für westdeutsche Fragen)으로 개칭되었고, 1971년 7월 9일에는 이를 해체하였다.⁴²⁾ 독일(Deutsche, Deutschland)과 관련 체제가 개입한 웃음거리는 국가적 상징의 정점이었던 국가를 실제 금지시켰던 것이었다. 1949년에 쓰인 국가의 가사, “독일, 하나의 조국(Deutschland einig Vaterland)”이라는 어휘 때문에 1974년 이래 가사가 불리거나 출판되는 것을 금지하였다.⁴³⁾

40)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 · Kultur in der Bildungsgesellschaft 1958-1976*, p.1427.

41) 이에 대응하여 서독에서는 1974년 5월 연방과 주정부 총리들이 만나서 공식적 문건에서는 서독의 국호 사용 시 약자 ‘BRD’가 아닌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서독은 유럽공동체의 공식 문건과 서한 등에서 서독의 약자 ‘BRD’ 사용을 금하는 업무지침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서독의 문화부 장관들은 학교 교과서에서 ‘BRD’ 표기를 금지하는 것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Margit Roth, *Zwei Staaten in Deutschland – Die sozialliberale Deutschland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1), p.47.

42) Rolf Steininger, *Von der Teilung zur Einheit, Deutschland 1945-1990*(Innsbruck: Studien Verlag), pp.301~303 of 606(Amazon Kindle).

43) Stefan Wolle, *Die Heile Welt der Diktatur – Alltag und Herrschaft in der DDR*

(2) 사회주의 독일 민족(Sozialistische deutsche Nation)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 소환: 프로이센과 루터

발터 슈미트(W. Schmidt)에 따르면 동독에서 2민족론의 주장은 1970년대 초에야 비로소 동독의 철학자와 역사가들이 당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 동독 사통당의 1976년 5월 당강령의 “학문, 교육 그리고 문화” 항목에서는 “사회주의 민족문화는 과거의 모든 인문주의적이고 진보적인 문화 업적의 세심한 돌봄과 습득이 포함된다. … 모든 위대하고 고귀한 인문주의적, 혁명적 업적은 현재의 과제에 대해 살아 있는 관계에 놓임으로써 동독에서 명예롭게 보존되고 계속될 것이다”⁴⁴⁾라고 하여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역사가 및 철학자 등에게 실천적 과제를 부여하였다.

바르텔(Horst Bartel)과 슈미트⁴⁵⁾가 전체 독일 역사에 대한 접근을

1971-1989, pp.68~69.

44) *Programm und Statut der SED – Mit einleitenden Kommentar von Karl Wilhelm Fricke*(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76), pp.86-87.

45) 이와 관련 슈미트는 1983년 독립적인 동독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동독은 서독과 공통성이 없는 새로운 경험과 가치, 규범을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 민족의식을 발전시켰다. 둘째, 독일사는 시간적으로 동독 수립 후가 아닌 독일 민족의 형성 시기 이후이며, 영토적으로 독일 제2제국은 물론 1806년의 신성로마제국을 포함하고, 사회적으로는 혁명적 노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계급과 계층의 활동이 동독의 전통에 속한다. 셋째, 동독은 “수세기에 걸친 민중의 반동에 대한 투쟁”에서 성장하였고, 서독은 작취 계급의 전통에 충실하였다. 넷째, 사회주의 민족의식은 지방과 지역의 역사를 포함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독일민족 국가의 발전은 “전 세계 혁명의 일부로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행기의 세계적 혁명적 격변의 일부”가 된다. 동독에서는 이러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즉 시간적, 영토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로 확대된 역사에 대한 접근법을 통합적 접근법이라

가능하게 하는 민족사적 관점을 발전시켰다. 즉 “그 특성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이고 그 뿌리가 독일인인 동독은 전체 독일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선언하였다”.⁴⁶⁾

바르텔은 왜 역사가 필요한지를 언급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와 투쟁에 있어서 동독 시민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착취사회와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계급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특히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가 그리하다”라고 하면서 “학문의 발전과 사회적 실천의 밀접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연구와 설명에 대한 상이한 방법과 시각을 요구하는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문제제기가 야기되었다”라고 주장하였다.⁴⁷⁾ 그리고 이렇게 확장된 역사 해석의 목표는 보다 유연하고 확장된 민족사를 통해 동독의 정체성, 즉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민족의식을 증진시켜 국가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⁴⁸⁾

지금까지 독일의 역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건이나 인물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동독으로서는 협의의 역사적 해석의 틀을 벗어

고 불렀고, 이전의 접근법은 선택적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였다. Walter Schmidt, “Deutsche Geschichte als Nationalgeschichte der DDR,” Helmut Meier und Walter Schmidt (Hrsg.), *Erbe und Tradition in der DDR – Die Diskussion der Historiker*(Berlin: Akademie-Verlag, 1988), pp.245~246.

46)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I · Kultur in der Konsumgesellschaft 1977-1990*(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19), p.1722.

47) Horst Bartel, “Erbe und Tradition in Geschichtsbild und Geschichtsforschung der DDR,” Helmut Meier/Walter Schmidt (Hrsg.), *Erbe und Tradition in der DDR – Die Diskussion der Historiker*(Berlin: Akademie-Verlag, 1988), pp.131~132.

48)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I · Kultur in der Konsumgesellschaft 1977-1990*, p.1723.

날 수 있는 학문적 논거가 필요하였다. 그동안 동독의 역사 기술이 역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혁명과 반동이라는 두 가지 기준만 부각했기 때문에 유산과 전통의 차이가 필요하지 않았고, 역사적 유산과 전통은 하나로 묶여 있었다.⁴⁹⁾

동독이 역사에서 계급투쟁만을 자신의 역사라고 하지 않고 독일의 모든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 “유산(Erbe)과 전통(Tradition)”이었다. 이전에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유산을 “모순이 있는 역사 전체의 개념”으로, 전통은 “동독 사회주의 역사의 기반이 되는 역사의 부분 개념”으로 이해하여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즉, 1981년 호르스트 바르텔(H. Bartel)이 발표한 논문 “동독에서의 역사 이미지와 역사 연구에서 유산과 전통(Erbe und Tradition in Geschichtsbild und Geschichtsforschung der DDR)”을 통해서 동독 사학계는 유산과 전통을 일반적이고 합의된 해석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⁵⁰⁾ 바르텔은 우선 유산과 전통의 구분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⁵¹⁾

역사 이미지와 역사의식은 오늘날 더 이상 개별적 사회주의 민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발전된 사회주의 민족의 요소 모두를 포괄한다. 이러한 민족은 지도적인 노동계급의 영향이 아니라 모든 근로계급과 계층

49) *Ibid.*, p.1723.

50) *Ibid.*, pp.1725~1726.

51) Horst Bartel, “Erbe und Tradition in Geschichtsbild und Geschichtsforschung der DDR,” p.130.

의 영향이다. 그래서 모든 모순이 있는 전체 독일 역사의 유산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족적 유산을 더욱 차별적으로 관찰하며, 동독의 전통 이미지를 확장하고 더욱 강력하게 차별화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바르텔은 “직접적으로 발견되고, 주어지고 전승된 상황, 즉 역사적으로 생성된 그리고 과거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문화적 관계, 개별 계급 및 계층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에 의한 행동, 이념과 문화적 업적의 전체가 역사적 유산(Erbe)”이며, 따라서 “유산의 개념은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것이 모순 속에 있는 전체 역사를 포괄한다. 우리는 이러한 유산을 직시해야만 하고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비판적 의미에서 이를 극복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을 온전히 마주하는 것이 역사에 있어서 통합이라고 하였다.⁵²⁾

이와 대조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보존해야 하며 계속 나아가야 할 동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역사적 발전, 현상 그리고 사실은 동독의 역사적 전통(Tradition) 또는 전통 이미지에 속한다. 따라서 유산이 역사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면 전통은 역사의 일부 또는 전체 유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바르텔은 동독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서로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는 150년의 사회주의 역사에서 혁명적 당과 노동계급이 성취한 혁명적이고 역사적인 가치와 현상이 전통이 되며, 이것이 전통 이미지와 전통 의식의 핵심

52) *Ibid.*, p.132.

이 된다. 둘째, 독일 민족의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모든 혁명적, 민주적, 진보적이고 인본주의적 현상, 발전, 인물 및 사실이 포함된다. 셋째, 동독의 전통에는 착취 계급 및 계층 등에 의한 활동의 긍정적 결과와 역사적 진보에 봉사하는 업적과 가치도 포괄한다.⁵³⁾ 역사적 과정, 사건 및 인물들이 보여 준 진보성이 종종 반동적인 것과 얽혀 있어서 이를 진보성이나 반동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할 경우 자신의 역사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해석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서 역사의 진보에 기여했지만 사회주의 형성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그래서 국가 수립 초기에 배제되었던 역사의 일부가 동독에 등장하게 되었다. 즉, 대표적인 사례로 절대주의 왕정의 상징인 프로이센(Preußen)과 농민혁명에 반대하였던 루터(Martin Luther)가 동독 역사의 유산으로 등장하였다. 이 둘이 동독의 역사로 다시 편입될 수 있었던 것은 프로이센은 동독의 중심지역인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가 발상지이고, 루터는 동독지역인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태어났고 종교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95개 테제의 반박문이 걸렸던 교회 또한 동독지역 비텐베르크(Wittenberg)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동독 지도부는 프로이센과 루터를 자신들의 역사에 다시 포함함으로써 동독 주민에게 동독이라는 국가 또는 사회주의 독일 민족에 커다란 의미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프로이센과 관련 동독은 유산과 전통을 구분하는 방법에 의해서 역

53) *Ibid.*, pp.133~134.

사적 복권을 진행하였다.⁵⁴⁾ 동독의 역사학자 잉그리트 미텐츠바이(I. Mittenzwei)는 1978년에 발표한 논문 “프로이센의 두 얼굴(Die zwei Gesichter Preussen)”에서 “바이마르뿐만 아니라 프로이센도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하면서 민족은 자신의 전통을 선택할 수 없고 직면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한 민족의 역사에는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반뿐만 아니라 굴복도 있고, 바이마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이센도 있고, 국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도 있다”라고 하면서 반동적인 것도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⁵⁾ 그녀는 1980년에 프리드리히 2세(프리드리히 대제)의 전기를 썼는데, 프로이센 군주의 역사적 의미를 사회적 진보의 실천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프리드리히 2세는 절대군주로서 초기 계몽사상에 열려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권력 정치의 이해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제국의 군사정책을 완성하기 위한 대내외 군사정책이 진보를 향한 개혁을 이끌었다고 보았다. 즉,

54) 서독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프로이센에 대한 큰 관심을 끄는 계기가 발생하였다. 서베를린 시장인 슈토베(D. Stobbe)가 1977년 6월 프로이센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하겠다고 공표하였다. 당시 슈피겔(1981/33)의 지적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혐오만큼이나 애국적인 향수로 가득 찬 감성적인 단어인 ‘프로이센’이 많은 관심을 이끌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전시회는 1981년 8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로피우스바우에서 “프로이센. 균형의 시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제에서 알 수 있듯이 1945년 이후 형성된 “프리드리히 대왕-비스마르크-히틀러”를 군국주의로 연결 짓는 시각에 반기를 드는 것이기도 하였다.

55) Ingrid Mittenzwei, “Die zwei Gesichter des Preussens,” Helmut Meier/Walter Schmidt (Hrsg.), *Erbe und Tradition in der DDR— Die Diskussion der Historiker* (Berlin: Akademie-Verlag, 1988), pp. 72~73.

프랑스의 위그노를 받아들이고 종교적 사고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예가 될 수 있었다.⁵⁶⁾

이제 프로이센은 유산으로 분류되었다. 동독에서 프로이센에 관한 전시회 및 학술회의가 열리고 출판물이 발간되고 TV-프로그램도 제작되는 등 프로이센의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베를린 중심가인 운터 덴 린덴(Unter den Linden)에 있었던 프리드리히 대제 동상이 군국주의 상징으로 여겨져 동독 정부 수립 이후 치워졌으나 1980년 호네커의 지시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였다.

프로이센에 대한 새로운 역사 해석은 특정한 기념 연도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으나, 마르틴 루터에 대한 평가는 루터 탄생 500주년이 되는 1983년을 계기로 동독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타났다. 1980년 6월 13일 500주년 행사를 위하여 동독에서 마르틴 루터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은 호네커가 맡았다.

1981년 가을에 이미 루터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루터의 비극은 그가 모든 반대 계급과 계층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혁명적 운동의 창시자로서의 역할과 궁극적으로 영주국을 지향하는 부르주와 온건 계급적 지위에 토대한 자신의 목표 설정 사이에서 모순에 빠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루터의 역사적 업적은 독일에서 초기 부르주와 혁명을 추동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본주의자, 독일 국민의 가장 훌륭한 아들로 다시 평가되었고, 더 이상 1950년대에 불렀던 ‘농민들의 반역자’나 ‘왕실의 하인’이 아니라 비판

56) Gerd Dietrich,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I · Kultur in der Konsumgesellschaft 1977-1990*, p.1728.

적 지식인이자 진정한 혁명가로 거듭나게 되었다.⁵⁷⁾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일상에서 전시회나 출판물 등을 통해서 새로운 유산(논쟁)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동독 주민들이 이를 정치가나 역사학자들이 의도하고 원하는 바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동독의 민족사가 확대되는 루터 또는 프로이센에 대한 역사적 소환이 동독이라는 국가이념을 강화했는지, 유산의 확대가 동독-민족의식을 강화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오히려 유산에 대한 배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민족문제를 일깨운 것으로 보인다.⁵⁸⁾ 프로이센과 루터가 동독의 전유물은 아니었고 서독의 역사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서독이 장기적 목표로 설정한 독일 통일이 이러한 공동의 민족 국가적 기원에 기초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동독이 이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사실 동독의 유산 논쟁 창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원했던 바는 아니었다.⁵⁹⁾ 서독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프로이센의 열풍이 불었고, 동독에게는 프로이센에 대한 역사 해석의 주도권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역사 분야 이외에서도 동독 민족 국가의 신화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영광이 깃든 역사적 건물들이 복원되고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기도 하였다.

57) *Ibid.*, p.1732.

58) *Ibid.*, p.1737.

59) *Ibid.*, p.1729.

2) 2민족론(Zwei-Nationen-Konzept)에 대한 여론조사와 2민족론이 남긴 유산

(1) 2민족론에 대한 동독 주민 대상 여론조사

이러한 2민족론이 동독 주민에게 어느 정도나 수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시 동독 사회과학연구원 등에서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민족문제를 주제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⁶⁰⁾

동독이 2민족론을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때이고, 아직은 2민족론이 공적 영역에서 금기시되었던 1969년에 실시된 여론조사가 있다. 1969년 동독 주민 3,088명을 대상으로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나는 전체 독일을 나의 조국으로 보고 있다”라는 설문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이에 대해 찬성(31.3%)과 반대(31.9%)의 답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설문은 아직 동독이 2민족론을 공개적으로 전개하기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이므로, 2민족론이 주장된 이후의 변화, 즉 동독 주민이 2민족론을 얼마나 수용하였는지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0) Walter Schmidt,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p.11; Detlef Eckert/Juergen Hofmann/Helmut Meier, *Zwischen Anschluss und Ankunft* (Potsdam 1992), p.11 ff.; Heinz Niemann, *Hinterm Zaun*(Berlin 1995), p.111 ff. 1964년부터 1979년까지 동독 당중앙위 직속으로 여론조사 연구소(Institut fuer Meinungsforschung)가 존재하였고, 활동 기간 동안 약 246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남아 있지 않으며, 이 중 약 100건 정도가 복원되었다.

〈표 1〉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나는 전체 독일을 나의 조국으로 보고 있다”

(단위: %)

찬성	부분적으로 찬성	반대	답변하지 않음
31.3	18.7	31.9	16.2

자료: Detlef Eckert/Juergen Hofmann/Helmut Meier, p.11; Akademie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Institut Geschichte.

〈표 2〉 “양 독일 국가는 여전히 하나의 단일민족인가”

(단위: %)

	긍정	부분적으로	부정	무응답
1977년	11.0	14.0	63.7	11.3
1983년	9.7	14.9	62.7	12.6

자료: Detlef Eckert/Juergen Hofmann/Helmut Meier, p.12; Akademie fü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Institut Geschichte.

1977년(1,230명의 조사대상)과 1983년(997명의 조사대상)에는 동일한 질문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표 2〉 참조). 동 조사시기에는 2민족론이 1974년의 헌법과 1976년 당의 프로그램에도 반영되고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2민족론의 프로파간다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는 동독에 아직 위기가 닥치지 않았고 경제 및 사회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시기는 동독 주민의 다수가 체제와 자신을 동일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정부 정책에 순응하였던 때이기도 하였다. 동 조사에서의 답변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2/3에 조금 못 미치는 응답자(1977: 63.7%, 1983: 62.7%)가 “양 독일이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 아니다”라는 데 동의하였고, 10% 내외가 하나의 독일 민족이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동독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동독 사통당의 2민족 체제가 교육과 미디어 그리고 프로파간다 등을 통해 동독 주민에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실패한 2민족론이 남긴 유산

이렇게 1970년대 이후 동독 주민에게 각인된 동서독 간 2민족론은 통일과 관련 독일 사회에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 놓았다. 우선 양 독 간 체제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되었고, 그리고 2민족론은 서로 다른 체제로 형성된 이질화와 차이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 40년에 걸쳐 형성된 서독과는 구별되는 동독 주민의 사고 및 행동 체계는 1989/90년의 통일과정과 1990년 통일 이후 동서독 간 통합과정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동독의 변혁기인 1989년 10월부터 1990년 3월까지 동독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면 체제의 붕괴가 곧 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40년간 동독의 체제에 동화된 동독의 지식인들이나 반체제인사들이 1989/90년의 변혁기에 우선적으로 보인 반응은 서독과 통일보다는 동독의 개혁이었다.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1989년 11월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의 86%가 개혁 사회주의를 원하였고 단지 5%만이 자본주의를 택하였다. 그러나 두 달 후에 실시된 1990년 1월의 조사에서는 개혁 사회주의는 56%로 감소하였고, 자본주의는 31%로 증가하였다.⁶¹⁾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1989년 10월 동독 평화혁명의 구호였던 동독의 민주적 개혁(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이다)이 통일 구호(Wir sind ein Volk:

61) Peter Förster/Günter Roski, *DDR zwischen Wende und Wahl*(Berlin: Links Druck, 1990), p. 56.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바뀌는 데에 3~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현실과 유사하다. 콜 서독 총리의 통일 추진과 동경의 대상으로 서독의 부와 자유라는 외부적 요인도 고려해야겠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감정이 동독 주민들로부터 다시 분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은 동독 2민족론의 견고성에 어느 정도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게 한다.

동독의 2민족론이 남긴 유산은 통일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동서독 간 통합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90년 10월 통일 이후에도 동독 주민의 정체성이 사라지기보다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더 강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2025년 2월 독일 총선의 결과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총선에서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의 구 동독지역에서 득표율은 구 서독지역보다 약 2배가량 높았다(독일대안당의 득표율은 구 서독지역에서 17.9%, 구 동독지역에서 34.6%였음). 이번 선거에서 독일대안당이 구동독지역에서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주 및 난민 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동독 사통당의 후속정당인 좌파당(Die Linke) — 좌파당의 구동독지역에서 득표율은 2021년 선거보다 2.5% 증가한 12.8%였고, 구 서독지역에서 득표율은 7.9%였음 — 과 독일의 국민정당인 기민련 그리고 사민당은 온건한 난민정책을 추진하였고, 독일대안당은 난민 추방 등의 강력한 반이민/반난민 정책을 주장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독일 사회의 한계선상에 노출되어 있는 구 동독지역 주민들이 이주 및 난민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이므로, 독일대안당의 반난민 캠페인이 이들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소구력이 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북한의 2국가-2민족론 주장의 배경과 향후 우리의 대응 방안

1) 북한의 2국가-2민족론 주장 배경

이제 동독의 2국가, 2민족론의 사례로부터 북한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발언을 하고 있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배경은 동독이 1966년부터 1969년 사이에 서독으로부터 경험한 사실들과 연결해 볼 수 있다. 동독은 1966년 사민당의 대연정 참여를 사민당의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였고, 1969년 9월 서독 총선에서 동독이 지원했던 공산당(DKP)은 0.3%의 득표율로 참패하였으며, 10월에는 사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 성립되었다. 이로 인하여 동독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통일과정에서 서독 내 사회주의자의 지지와 연대를 통해 사회주의 혁명을 서독에서 실현하겠다는 계획, 즉 동독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가능성으로서의 통일에 이르는 전략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동독의 이러한 전략은 동독 측에서 비밀 협상 중재자로 활동하였던 헤르만 폰 베르크(Hermann von Berg)가 기본조약 체결 전에 자신의 서독 측 대화 파트너에게 전한 동독의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폰 베르크는 동독의 대서독정책의 장기적 목표는 “서독 사민당이 동독 친화적 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침투되어 (서독에서 활동하는) 신공산당(DKP)과 행동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동독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⁶²⁾

북한도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남한으로부터 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당장에 북한 주도의 통일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북한에 시간적 여유를 주고 여전히 자신들이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는 명분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이 도래했을 때, 통일 과정에서 남한 내 진보세력의 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요인도 작용하여 남한과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9년 하노이 미북 접촉 등을 거치면서 북한은 남한 내 진보세력과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남한 내 진보세력과 연대한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이제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 김정은이 2023년 12월 30일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 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 그대로 이어져 왔다 …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동서독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분단국가 간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이다. 남북 간 경제적 격차는 이미 북한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패배이지만, 남한 내 진보세력에 대한 미몽으로 지금까지는 남북 간 통일문제를 전술적 차원이 아닌 전략적 차원에서 운

62) Heike Amos,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p.187.

용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북한은 이러한 남북 간 현실을 직시하여 2국가 2민족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북한 체제의 수성을 민족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앞으로 통일문제를 언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는 전략적 목표에 순응하는 전술적 차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의 차단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서독 사례에 대한 검토

향후 2국가/2민족론을 주장하면서 남한을 적대시하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견지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최대의 도전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과 평화를 어떻게 접목(시간적 배열, 병렬, 병존, 공존 및 통합 방식)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에서도 기민련은 통일원칙론을, 사민당은 평화공존론을 주장하였다. 서독에서 통일원칙론은 통일을 국가 목표의 최고의 규범으로 설정하고, 일상에서 교육 등을 통해 민족동질성 유지 및 통일의지를 고양하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원칙론하에서는 열세에 있는 국가가 교류협력의 통일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차단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 국가 간 교류협력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고 불완전한 평화가 지속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평화공존론은 평화 유지를 통한 공존이 기본 목표이며, 양 국가 간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상대 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한다는 것이 전제된다. 평화공존론의 문제는 동독과 같은 독재국가에 대하여 체제공존을 인정함으로써 독재를 정당화하고,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점차 약화되며 나아가 분단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영구 분단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독의 경우 통일원칙론과 평화공존론 간 불완전한 통합 내지 Modus Vivendi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양대 정당이 큰 틀에서 평화공존론을 인정하였지만, 기민련은 틀 안에서 나름의 통일원칙을 견지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 관련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였던 동독이 붕괴되기 2년 전인 1987년 9월 서독 기민련의 콜(H. Kohl) 총리는 서독을 방문한 호네커를 초대한 만찬 연설에서 그의 면전에 대고 “기본법상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이와 반대로 1987년 8월 서독의 사민당과 동독의 사통당은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이데올로기 갈등과 공동의 안보(Der Streit der Ideologien und die gemeinsame Sicherheit)”라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양측 모두는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병존하고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비해야 한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의 존재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희망은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 … 체제 간의 경쟁은 서로의 개혁 의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 공존과 공동의 안보는 시간적 제약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양 정당의 이렇게 갈라진 길은 통일의 계기가 도래했을 때, 완전히 서로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하였다. 브란트 총리(사민당)는 “1960년대부터 통일이라는 용어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80년대에는 그

입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1988년에는 ‘통일에 대한 희망은 서독의 자기기만(Lebenslüge)’⁶³⁾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민당 지도부는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스스로 내면화하였고 통일이 자기기만이라는 결론은 어찌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있었던 사민당으로서는 독일 통일의 갈림길이었던 1990년 3월 18일의 동독 자유총선에서 “신속한 통일”이 아닌 “신중한 통일”의 슬로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도 하다. 1989/90년의 상황에서 동독과 통일이나 아니면 (잠정적인) 공존이나를 결정할 시기에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기민련이 집권하고 있었던 것은 독일에는 커다란 행운이었다. 물론 사민당이 체결한 동서독 기본조약이 동서독 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민당은 이러한 교류협력이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결과로 통일의 시기가 불현듯 찾아왔을 때 통일을 추동할 근거와 동력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의 딜레마는 평화와 통일을 모두 원하지만 현재 통일원칙론과 평화공존론의 두 가지 방안은 상호 배척하는 관계여서 점점(병렬, 병존, 공존 및 통합)을 찾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정권 변화에 따라 대북 및 통일 정책이 스펙트럼의 양 극단을 오고가는 양상이 계속 반복될 것이고 어찌면 통일도 놓치고 평화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63) Bundeskanzler Willy Brandt Stiftung, “Willy Brandt online biografie,” <https://www.willy-brandt-biografie.de/politik/deutsche-einheit/>(검색일: 2025년 2월 25일).

6. 맺는말

동독이 1970년 2민족론을 주장한 배경에는 서독 및 동독의 요인과 국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동독은 2민족론을 이론화하면서 기존의 민족개념에 계급문제를 추가해 자신을 '사회주의 독일민족'으로 정의하고 '자본주의 독일민족'인 서독과의 통일을 부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당강령에서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독은 서독과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정체성 강화 노력을 펼쳤고, 유산과 전통을 구분하면서 사회주의 역사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통일로 인해 동독의 2민족론은 실패한 역사가 되었다. 이러한 2민족론은 분단 시기 동서독 관계에서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는 동서독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후자, 즉 실패한 역사의 유산이 남긴 문제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2민족론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한 번 더 언급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하나는 당면과제로 북한의 2민족론이 가져올 대남 차단정책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두 가지 지향(통일과 평화) 사이에 합의점을 찾아야만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가 가진 민족문제의 헤게모니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과제로 북한의 2민족론이 남긴 유산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통합과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원장은 통일 이후 내적 통합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나는 우리가 동독 시절에 스스로를 ‘동독인(Ostdeutsche)’으로 정의했던 기억이 없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독일인(Deutsche)’으로 이해했다. ‘동독인의 정체성(Ostdeutsche Identität)’이라는 것은 동독이 사라진 후에야 생겨난 것이다. (통일 이후) 차별과 존중 결여(동독에서의 경험, 삶, 가치 등에 대한 인정 결여)라는 공동의 경험이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것은 통일 이후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치면서 나타나는 피하기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더 늦기 전에 학교 및 성인교육에서 예상되는 남북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족교육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 사회가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북한 방송 개방과 같은 정책의 도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 투고: 2025.02.26. / 수정: 2025.04.02. / 채택: 2025.04.06.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법무부, 『동서독 교류협력 법제 연구』(서울: 법무부, 2008).

올로, 디트릭(Dietrich Orlow), 『독일 현대사: 1871년 독일제국 수립부터 현재까지』, 문수현 옮김(서울: 미지북스, 2019).

임지현, 『마르크스·엔겔스와 민족문제』(서울: 탐구당, 1990).

_____, 『민족문제와 마르크스주의자들』(서울: 도서출판 한겨레, 1986).

클라크, 크리스토퍼(Christopher Clark), 『강철왕국 프로이센』, 박병화 옮김(서울: 도서출판 마티, 2022).

헷세, 콘라드(Konrad Hesse), 『서독헌법원론』, 계희열 옮김(서울: 삼영사, 1987).

호이어, 카트야(Katja Hoyer), 『장벽 너머: 사라진 나라, 동독 1949-1990』, 송예슬 옮김(서울: 서해문집, 2024).

2) 논문

이동기, “1950년대 후반 동독 사통당(SED)의 국가연합 통일안,” 『서양사론』, 제102호 (2009).

_____, “1967~1974년 동독의 통일 포기과 이민족론,” 『평화들 PEACE』, 제3권 1호 (2024).

2. 국외 자료

1) 단행본

Amos, Heike, *Die SED-Deutschlandpolitik 1961 bis 1989 – Ziele, Aktivitaeten und Konflikte*(Goettingen: V&R, 2015).

Axen, Hermann, *Zur Entwicklung der sozialistischen Nation in der DDR*(Berlin: Diez Verlag, 1973).

- Benser, Günter, et al.,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SED – Band 2. 1945-1971*, (Berlin: Dietz Verl, 1986).
- Dietrich, Gerd,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 · Kultur in der Bildungsgesellschaft 1958-1976*(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19).
- _____, *Kulturgeschichte der DDR – Band III·Kultur in der Konsumgesellschaft 1977-1990*(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19).
- Eckert, Detlef und Jürgen Hofmann/Helmut Meier, *Zwischen Anschluss und Ankunft* (Potsdam, 1992).
- Förster, Peter und Günter Roski, *DDR zwischen Wende und Wahl*(Berlin: Links Druck, 1990).
- Herbst, Andreas, et al. (Hg.), *Die SED – Geschichte/Organisation/Politik, Ein Handbuch* (Berlin: Dietz Verlag, 1997).
- Kielmansegg, *Peter Graf, Nach der Katastrophe – Eine Geschichte des geteilten Deutschland*(Berlin: Siedler Verlag, 2000).
- Kosing, Alfred, *Nat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Berlin: Dietz Verlag, 1976).
- Malycha, Andreas und Peter Jochen Winters, *Die SED – Geschichte einer deutschen Partei*(München: C.H. Beck, 2009).
- Meier, Helmut und Walter Schmidt (Hrsg.), *Erbe und Tradition in der DDR – Die Diskussion der Historiker*(Berlin: Akademie-Verlag, 1988).
- Niemann, Heinz, *Hintern Zaun*(Berlin: edition ost, 1995).
- Redaktion des Dietz Verlages, *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Berlin: Dietz Verlag, 1988).
- Reuter, Jürgen, *Die Abgrenzungspolitik der DDR v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n siebziger und frühen achtziger Jahren*(Bonn: 1991), Dissertation.
- Roth, Margit, *Innerdeutsche Bestandsaufnahme der Bundesrepublik 1969-1989: Neue Deutung*(Wiesbaden: Springer VS, 2014).
- _____, *Zwei Staaten in Deutschland – Die sozialliberale Deutschlandpolitik und ihre Auswirkungen 1969-1978*(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81).

Steininger, Rolf, *Von der Teilung zur Einhei, Deutschland 1945-1990*(Innsbruck: Studien Verlag), Amazon Kindle.

Weidenfeld, Werner, *DIE FRAGE NACH DER EINHEIT DER DEUTSCHEN NATION*(München: Olzog Verlag, 1981).

Wolle, Stefan, *Der große Plan – Alltag und Herrschaft in der DDR 1949-1961*(Berlin: Ch. Links, 2013).

_____, *Die Heile Welt der Diktatur – Alltag und Herrschaft in der DDR 1971-1989* (Berlin: Ch. Links, 2013).

Zieger, Gottfried, *Die Haltung von SED und DDR zur Einheit Deutschlands 1949-1987*(Köln: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88).

2) 논문

Busse, Dietrich, “Deutsche Nation – Zur Geschichte eines Leitbegriffs im Deutschland vor u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Ruth Reiher (Hrsg.), *Sprache im Konflikt – Zur Rolle der Sprache in sozialen, politischen und militaerischen Auseinandersetzungen*(Berlin: de Gruyter, 1995), pp.203~231.

Reuter, Jürgen, “Vor zwanzig Jahren Honecker führ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Nationalität” und “Nation” ein,” *Potsdamer Bulletin fuer Zeithistorische Studien*, Nr. 3/Juni 1995, pp.41~51.

Schmidt, Walter, “Das Zwei-Nationen-Konzept der SED und sein Scheitern – Nationsdiskussion in der DDR in den 70er und 80er Jahren,” *hefte zur ddr-geschichte 38*(Berlin: Helle Panke, 1996).

Schweizer, Roland W., “Die DDR und die Nationale Frage. Zum Wandel der Positionen von der Staatsgründung bis zur Gegenwart,” *APuZ*, December 21, 1985.

3) 기타 자료

bpb, “Auf den Spuren des DDR-Unrechts: Die Behörde “Salzgitter,” <https://>

www.bpb.de/kurz-knapp/hintergrund-aktuell/237863/auf-den-spuren-des-ddr-unrechts-die-behoerde-salzgitter/(검색일: 2025년 2월 25일).

Bundeskanzler Willy Brandt Stiftung, “Willy Brandt online biografie,”<https://www.willy-brandt-biografie.de/politik/deutsche-einheit/>(검색일: 2025년 2월 25일).

_____, “Deutschland-Chronik bis 2000,” <https://www.bpb.de/themen/zeit-kulturgeschichte/deutschland-chronik/131594/15-maerz-1967/>(검색일: 2025년 1월 30일).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SED 1945-1971(Berlin: Dietz Verlag, 1986).

Dokumente zur Geschichte der SED 1971-1986(Berlin: Dietz Verlag, 1986).

Lemo, “Zwei-Staaten-Theorie,” https://www.hdg.de/lemo/kapitel/geteiltes-deutschland-gruenderjahre/deutsche-frage/zwei-staaten-theorie.html?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년 1월 30일).

Programm und Statut der SED – Mit einleitenden Kommentar von Karl Wilhelm Fricke(Köln: Wissenschaft und Politik, 1976).

The Implications and Challenges for Inter-Korean Relations Based on East Germany's Two-Nation Theory and the Discourse on the Socialist German Nation

Lee, Bongki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article analyzes East Germany's 'Two-Nations theory' and the discourse on the socialist German nation, and based on the East German case examines the background behind North Korea's claim of two hostile states and two separate nations, as well as possible countermeasures to its hostile policy toward South Korea (a policy of isolation). In the early stages of its establishment, East Germany, believing in the feasibility of socialism, advocated a "One Nation, One State" theory. However, it later shifted its position to "One Nation, Two States" within the context of its proposed confederation. In October 1969, West Germany partially accommodated East Germany's demands through the de facto recognition of the two states and declared the policy of "maintaining national unity," to which East Germany responded with the

Two-Nations theory. East Germany incorporated class issues into the existing ethnic theories, labeling itself the “socialist German nation” and rejecting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Moreover, it sought to expand its historical narrativ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cialist German national identity. Although East Germany’s Two-Nations theory became a failed chapter with the German reunification, the legacy of this failed history remains an obstacle in the integration process of reunified Germany, requiring countermeasures to now be prepared. Furthermore, in order to effectively counter the anticipated North Korean containment policies toward South Korea stemming from North Korea’s own two-nations theory, it is essential to first identify the points of intersection between the principles of reunification and peaceful coexistence within Korean society, exploring frameworks such as parallelism, coexistence, cohabitation, and integration.

Keywords: East Germany, Two-Nations, Socialist German Nation, nationality, legacy and tradition, unification principle, peaceful coexistence